

부산민언련 2016 총선보도 신문모니터 1차 주간보고서

- 모니터 기간 : 2016년 2월 29일~3월 5일
- 모니터 대상 : 부산일보, 국제신문

필리버스터, 발목잡기 해프닝으로만 보도된 것 아쉽다

3월 첫째 주 초반 이슈는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이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이 주에 이에 관해 각 5건의 기사를 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일주일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단을 촉구하거나 이후 양당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제신문 3월 2일 1면]



[부산일보 3월 2일 3면 기사]



제목으로는 <필리버스터 뒷에 빠진 국회, 선거구 획정안 처리 난망>(국제신문/ 3월 1일), <막 내리는 필리버스터, 쟁점법안 곧 처리>(부산일보/ 3월 2일),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오늘 선거법 등 처리>(국제신문/ 3월 2일)를 골라 그 동안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을 잠시 정화하고 선거법만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선거법 처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선 제목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줬다.

세심하지 못한 제목 선택

부산일보는 2월 29일자 사설 <선거구 획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위한 정치력 발휘를>에서는 양당을 모두 나무랐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의 비방 끝 전술은 불

쌍사나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낼 명분을 주는 다수당의 여유가 필요하다", "야당 역시 모든 것을 얻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무제한토론을 계속해 총선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양측에게 책임을 묻고 협상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사 전반에서 필리버스터를 양측이 대결하는 해프닝으로 다루기만 했지, 어떤 내용들이 토론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의 쟁점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했다. 부산일보는 3월 3일자 사설 <필리버스터 정국, 성숙한 정치 교훈 삼는 계기 되어야>에서 "무릇 정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말의 성찬'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이라고 했지만 정작 부산일보 지면에는 '말의 성찬'은 실리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몇 시간을 버텨 기록을 세웠거나 새누리당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는 싸움 중계만 있었다. '성숙한 정치 교훈' 삼을 좋은 소스를 두고도 수준 있는 토론을 해 볼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시민들은 국회 방청을 신청하고, 인터넷 중계를 보며 SNS상에서 의견을 나누고, 장시간 발언 중에 핵심을 골라 스스로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했다. 적극적인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도 모자란 보도였다.

알맹이인 '말의 성찬'은 쏙 빠져

국제신문은 3월 3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서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의의와 효력을 정리했다. "9.11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지만, 한 면만을 서술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이래로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오남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그 우려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5년 만에 통과되었다는 것만 전하면, 결국 필요했던 법안이 그 동안 억지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통합방위법에 이미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음에도 이를 국무총리도 몰랐고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다는 점이 김광진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번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 것만 보도해서 테러방지법의 옥상옥과 같은 허점은 가려졌다.

테러방지법의 하지도 깊었어야 한다

필리버스터의 결과를 두고는 <더민주는 '존재감 부각', 새누리는 '중도층 결집'>(부산일보/ 3월 3일), <모처럼 존재감 과시한 野, 그래도 실리는 다 쟁진 興>(국제신문/ 3월 3일)라고 분석하였는데, 앞서 테러방지법의 쟁점은 따지지 못했으면서 상황 종료 후 선거공학적 전망만 남아 아쉬웠다. 결국 총선 일정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뉴스마저 잠식해 버렸다. 이후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

들도 일정에 쫓겨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 국제신문은 3월 3일 <노동법, 서비스법 20대 국회로 토스?>에서 19대 국회에 남은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를 전망했는데, 청와대가 압박하는 상황을 전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을 인용해 서비스법과 파견법의 필요성만을 역설했다. 노동개혁 4법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학구조개혁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11개 법안이 남아있다는 데 이 법안들의 쟁점을 소개하는 기사를 후속보도 했으면 한다.

[국제신문 3월 3일 4면 기사]



[부산일보 3월 3일 4면 기사]



'해운대 폐선부지 활용'이라는 지역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연결시키다

국제신문은 2월 29일 <시민 자산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하자>를 시작으로 3월 1일과 2일, 4일에도 1면 탑 기사로 <야권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 공약">, <해운대 폐선부지 일대 벌써 투기 조짐>, <부산시 폐선부지 공원화 의지 없다>를 연달아 내면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시민의 재산으로 돌려받자는 기획 기사를 실었다. "최소한의 상업개발"이라는 기존 원칙을 폐기하고 '부산의 자산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프레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을 보도하고, 과거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든 과정에서 민간군이 핵심한 것을 좋은 선례로 꼽았다. 지역 현안을 부각시키고 과거 사례,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 시민단체의 움직임,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안내 등 다방면을 짚어 기획 기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해운대 폐선부지 관련 국제신문 기사목록]

날짜	면	제목
2/26	1	해운대 폐선부지 난개발 부산시 목인
	3	폭 10m 폐선부지에 보행권과 상업개발 공존 못해
	3	"뒷집 진 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사설] 시민자산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하자
2/29	1	'시민 자산'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하자
	3	개발않고 보존하니 오히려 더 성공한 '방치의 역설'

	3	民官政 합심 특별법 만들고 152만명 서명
	3	환경, 시민단체 주도 범시민 환수운동 움직임
	3	땅값 17%나 오른 해운대 개발사업 가치 올랐지만 곳곳서 환경문제와 충돌
3/1	1	[사설] 해운대 옛 철길 사업개발 저지 시가 나서라
	27	야권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 공약"
3/2	1	[사설] 해운대 철길은 돈벌이 수단 아닌 후대 유산이다
	27	해운대 폐선부지 일대 벌써 투기 조짐
3/4	1	[사설] 해운대 철길 상업개발 새누리당 입장은 뭔가
	3	부산시 폐선부지 공원화 의지 없다
	3	포항 도심 관동 200억 땅 무상으로 따내, 4.3km 숲길 꾸민다
	3	"부산 폐선부지 난개발, 서 시장 입장 밝혀라"
	27	근처 땅값 2.5배 폭등...투기 현실화 [사설] 시가 폐선부지 공원화할 수 있는데도 외면했다니

국제신문이 해운대 폐선 부지를 이슈로 띄운 것은 2월 26일부터였다. <해운대 폐선부지 난개발 부산시 목인>이라는 기사에서 폐선부지 상업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주)해운대블루라인의 사업 계획 중에 특히 레일바이크가 부산시의 보행로 확보 방안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그림에도 "부산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장을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난개발을 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3면의 <폭 10m 폐선부지에 보행권과 상업개발 공존 못해>는 부산시 개발안과 (주)해운대블루라인의 개발안이 어떤 점에서 상충하는지 그림으로 비교해 줘 이해하기가 좋았다. 쉽고 친절한 기사였다.

[국제신문 2월 26일 3면 기사]



■ '시민 품으로 환원' 서병수 시장 공약 지켜야

市 원칙은 산책로 폭 6.7m
사업자는 3.4m로 축소해
레일바이크 등 설치 추진

관철될 '권기 길' 가능 상설
폐적성 떨어지고 안전 문제
미포-송정 가치 떨어뜨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인 미포-송정 구간(4.8km)의 상업개발 추진

달라낸 면적을 합한 것이다. 시에서 주장하는 산 쪽 부지에 스카이라이더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판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5일 "보행데크는 예산과 안전성 문제는 물론 남떠러지가 많아 기술적으로도 설치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시민이 쾌적하게 걸으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보행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신문, 지속속적인 문제제기와 친절한 기사 돋보여

폐선부지 활용안은 이 기간 야권의 총선 공약으로 떠올랐다. 국제신문은 3월 1일에는 <야권 “해운대 폐선부지 환수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폐선부지 공공개발을 4.13총선 공약으로 냈다고 보도했다. 정의당이 지면에 등장한 것은 오랜만이였다. 그리고 3월 2일자 사설 <해운대 철길 상업개발 새누리당 입장은 뭔가>에서 “공당으로서 해운대 철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야권이 총선 공약화에 나선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이 묵묵부답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새누리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반적인 문제제기는 좋으나 인터뷰는 좀 더 날카로웠으면 한다. 국제신문은 상업개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민에게 폐선부지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솔직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폐선부지는 국가철도 시설로 사실상 징발을 당한 것”이니 “용도가 다했으면 지역에 돌려줘야한다”는 자기 논지를 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인터뷰해 “상업개발이든 공원화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라며 부산시에 명확한 입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나 철도공단의 관계자는 길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라 개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미포~송정 구간을 한정해서 묻거나 이른바 ‘최소한의’ 상업개발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누구나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업개발과 공공개발의 차이도 유아무야 몰타기 될 것이다.

무엇이 상업개발이고 어디까지가 공공개발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 주 동안 국제신문의 1면이 해운대 폐선부지 연속기사로 채워진 데 반해 부산일보는 이에 대한 보도가 전무했다. 부산일보는 부산MBC와 함께 (주)해운대블루라인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가 이를 감시하는 보도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부산일보는 전 주인 2월 26일 2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 본궤도>에서 (주)해운대블루라인의 창립총회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폐선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운대 해안가의 수려한 풍광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다양한 즐길 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포에서 송정까지 이동하는 협궤풍경열차는 관광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대체 교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 주민편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해당사자로 침묵한 부산일보

물론 교통 약자도 해운대 해안가의 풍광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이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교통수단으로 협궤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가 최선인지, 카페가 줄지어 들어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부산일보는 앞선 보도에서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미 10곳이 넘는다고 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을 또 들여와 미포 일대를 특색 없고 식상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해 볼 수 있다. 카페와 공방거리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 증대효과를 가져올 지도 면밀히 예측해봐야 한다. 부산일보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개발 사업에 감시자이면서도 스스로 사업자로 참여했다. 언론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것이 애초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자사의 이익에 눈 돌리느라 시시비비를 따질 때 물러질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땅과 바다를 물려줄 부산 시민의 편에 서서 해운대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심도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무엇을 혁신하기 위한 ‘현역 물갈이’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권 발 선거뉴스의 이슈는 단연 공천이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통해 현역 물갈이를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내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살생부 때문에 이어 여론조사 문건이 유출돼 분란을 겪었다. 과연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컷오프 될 것인지, PK지역에 전략공천은 얼마나 될 것인지 양 신문 다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현역 물갈이가 무엇을 청산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 보도는 부족했다.

부산일보는 2월 29일 <여론조사 끝, 부적격 의원 대거 교체>에서 이한구 공천위원장과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앞서 발표되고 있는) TK이슈는 쉽게 당선 시켜놨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뭘 했냐는 것”, “새누리당 PK의원들이 누구 덕에 국회의원 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박 대통령을 위해 몸 던져 일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라는 말에서 공천 자격과 부적격을 가르는 기준이 대통령과의 교감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 전하기에는 급급하면서 정작 이 공천 기준이 적절한지는 조명하지 않았다.

친박이 전략공천되는 것이 옳은지 따지는 보도 없어

부산일보는 오히려 전략공천에 무게를 주고 현역의원 상당수를 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자체 여론조사 분석 결과도 그랬고, 3월 1일에는 데스크칼럼 <무대다운 결단을 기대하며>에서 그런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칼럼에서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하려면 모

든 후보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막강한 특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의의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짚었다. "계파보스나 당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의 수단으로 전락공천을 악용한 적도 있"지만 "그건 '운영'의 잘못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정당의 운영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따져볼 때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친박' 여부가 공천 자격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자기사람 심기'라는 '운영'상의 잘못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존 문제인 혁신안을 손질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의 전망이 많았다. <20% 컷오프 등 문제 많아... 김종인 '문 혁신안' 손질시사>(부산일보/ 2월 29일)에서는 "문 전 대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했고, <힘 실린 김종인 '마이웨이'에 더민주 곳곳 불협화음>(부산일보/ 3월 1일), <'김종인표 공천' - '문제인표 영입' 충돌 조짐>(부산일보/ 3월 4일), <하는 일마다 부딪치는 문제인, 김종인>(국제신문/ 3월 2일) 등 제목에서 갈등을 강조했다. 문제인 전 대표의 반응은 짐작해서 썼다. 문제인 전 대표는 3월 6일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김종인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해 나가어도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완은 했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지역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주문한 점 의미있다

부산일보는 3월 3일 <갈라선 지 얼마라고... 야권연대 '불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통합제외와 이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전했다. 기사 제목은 본인 말미에 실은 새누리당 발언에서 따와 기사 자체 내용의 함량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가운 제목을 선택했다.

국제신문은 중앙당의 흐름을 받아 <부산 야권도 단일화 '고차 방정식'>(국제신문/ 3월 4일)에서 부산지역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짚기도 했다. 지역지 정치면이지만 각 정당의 부산시장 인물들은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모처럼 부산의 독자적인 정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중앙당에서 불어올 바람만 기다리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지역 언론도 함께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지적도 적지만 의미 있었다. 부산일보는 3월 4일 칼럼 <수도권 블랙홀에 빠진 입법권력>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결정되고 말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국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는 양원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꼽았다.

국제신문 2월 29일 < [기자수첩] 야당, PK 전략 있다>에서 중선관위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무산된 것을 아쉽다고 짚었고, 같은 날 사설 <능장 제출 선거구 획정안 여야 서둘러 처리해야>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추려면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획정위원들의 토로를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면에 지역공약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슈화하기는 모자랐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에 대해서는 압박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부산일보는 2월 29일 칼럼 <부산 사람들이 총선을 기다리는 이유>에서 신공항이 가덕도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은 '총선을 기다리는 이유'인데 정작 본문에서는 "부산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라면서 "재미없는 선거"보다는 "신공항, 그 결판의 순간"에 "진정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논리가 배제되고, 오로지 신공항 그 자체의 논리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 선정이 이뤄진다면 가덕도가 정당"이라며 "반에 하나 밀양으로 결정된다면... 부산은 '민란' 수준의 붕괴가 예상된다. 당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전,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공약을 뺀다면 부산사람들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켈기대회로 시작해 김해공항 사수 투쟁, 민자 신공항 독자 추진, 나아가 투표로 현실화될 것이다... 모든 선거의 불가촉성이 높아질 것이고, 일당 독점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신공항을 뺀다면 선거로 심판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칼럼을 마무리해서 정책결정자에게 엄포를 놓았다. 전반적으로 예측이 과하고 극단적인 편이었다. 이어서 3월 1일에는 <김해공항 승객 올해도 '폭발적 증가' 계속 된다>는 기사를 내고 신공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꾸준히 동남권 신공항은 꼭 건설해야 하고 입지는 가덕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부산일보, 극단적인 어조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 주장하고 국제신문, 신공항 공약 이행가능성 의문 제기

이런 지역의 거센 요구를 받아서인지 새누리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이 지역 공약으로 신공항을 내세운 적은 있지만 전국 공약으로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처음이다.

국제신문은 이 공약의 이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월 3일 <'선거용 감초' 집권당 신공항 공약>에서는 신공항 입지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6월말 발표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치러지는 4월 총선에서 이를 내세우는 것은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월 4일 사설 <신공항은 선거 때

면 우려먹는 단골 공약인가)에서는 "이런 마당에 느닷없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역간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반면 실익은 없는 하나마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선거 때만 되면 신공 항을 건설해줄 것처럼 공약을 하고는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 온 게 집권당의 행태였다"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각 후보들의 공적 가져가기 다툼으로 표류하는 정책사업 시기적절하게 짚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PK와 TK가 경쟁을 하는 구도라면, 부산 안에서도 신설될 공공편 의시설들을 놓고 지역 간 다툼이 일고 있다.

부산일보에 이를 '정치권에 휘둘리는 국회도서관 분관'이라는 기사에서 다뤘다. <국회의장, 부산 시장 '입지 다툼'에 사업까지 위기>(부산일보/ 3월 1일)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을 당초 부산진구의 시민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추진하다가, 뒤늦게 서병수 시장이 명지신도시에 두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서부산개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총선 후보로 나선 나성린, 김도읍 의원과 이수원 예비후보도 각자 자기 지역구 내에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다."정치권이 갈등을 빚자 기재부가 다른 시도까지 포함시켜 입지를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조기에 하고 나선 것은 적절했다.

이어 아랫 기사 <"서부산청사, 의료원 우리 구로" 균형발전정책도 '흔들'>에서 서부산권 총선후보로 나선 이들이 서로 자기 구에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다투고 있다고 보도하고 "여야의 서부산권 총선 후보가 결정되면 죽기 살기로 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만큼 시가 정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입지를 정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염려했다. 향후에도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이나 서부산권 균형발전 정책이 정치권의 공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가길 바란다.

정당이 발표하는 공약, 대한 단순나열식 소개에 그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더민주 부산시당 '교통공약' 선점, "정책선거 거둬보자">(부산일보/ 3월 4일), <부산 더민주 "동서 연결 스마트터널 짓겠다">(국제신문/ 3월 4일)라는 기사를 내고 '상습 침수 구간 스마트 터널 신설'과 '도시철도 1호선 노후전동차 전량 교체'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후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교통공약의 내용들을 안내했다. 이 날 정책발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유정동 총선기획단장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도 정책을 뚜렷이 밝혀 이번 부산 지역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치권이 한참동안 공천 소식으로만 채워지던 가운데 정책공약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제신문도 기사에서 "더민주

는 교통분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총선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輿, 인사청탁자 명단 무조건 공개 추진>(국제신문/ 3월 2일)은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을 소개했다.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든지,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학업성적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과 재직자 중에 국비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기사 자체는 정책을 이슈화하기엔 모자랐다. 여러 개 공약의 목록들을 단순 나열하는 보도였다. 부산일보는 부산 시내 특히 동부산권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연속적으로 비중 있게 써 왔다. 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김에 공약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해서 부산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심도 있게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3월 15일
2016 총선보도 부산시민 모니터단